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 공개를 반대하는 수원시민 선언

2009년 3월 10일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평가가 실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며 전국 동시 진단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진단평가는 학교별로 각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인 판단 아래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부진아 또는 보충학습 대상자에 대한 추후 지도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진단평가는 2008년 3월, 10월, 12월에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처럼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 학업성취도 결과가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서울 강남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점수가 높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는 오히려 전국단위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등급제 시행의 자료로 악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액 사교육을 시키는 부유층 거주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전국 일제고사 시험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쏟아 붓는 예산이 160억 원인 반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을 줄이고 시험만 많이 본다교 학력격차가 해소되는 것입니까? 일제고사에 드는 예산으로 학습 부진학생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지난 해 실시된 일제고사 시험에서 임실교육청을 포함 많은 지역에서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거나 장애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을 제외하는 등 비교육적 사례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는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한 반교육적인 부정편법만 성행하게 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제고사 결과 이후 나타날 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대책,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해소 대책은 전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선택제 확대를 통해 지역 간 학교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제고사 학력 점수로 교장들의 승진, 보수와 연계하고, 교장들에게는 교사의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고 합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상징되는 데, 자칫 이번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공개 행위가 불필요한 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 조장,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성적공개에 따른 열등학생 낙인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우리 수원시민들은 학생들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고 올바른 인격 형성과 사람됨을 추구해야 할 학교교육이 무분별한 경쟁과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입시 전쟁터로 전락되는 것은 국민이 원치 않으며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일제고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 교과부는 전국단위 3월 10일 진단평가 계획을 철회하라
- ▲ 교과부는 학교를 서열화하는 학교별 성적공개를 철회하라!
- ▲ 교과부는 학습부진학생 지원방안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예산을 확충하라!

수원시민대책회의

